

「북향민 청년과의 대화」 개최, 정책 과정의 개선점과 통합 방안 논의

【관련 국정과제】 116. 분단고통 해소와 인도적 문제 해결

- 통일부는 7월 8일(수), ‘제3회 북한이탈주민(북향민)의 날’(7월 14일)을 앞두고 청와대 국민통합비서관, 통일정책비서관과 함께 북향민 청년들과 함께하는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 이번 간담회는 대한민국 사회에 정착 중인 북향민 청년들이 겪는 다양한 적응 과정의 어려움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특히 이날 참석한 북향민 청년들은 북향민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관심이 ‘지원’을 넘어 ‘통합’으로 진전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 그간 다양한 제도적 지원으로 북향민 고용률과 같은 양적지표는 상당한 개선이 이뤄졌지만, 취업을 위해서 북향민임을 숨겨야 하는 현실은 여전히 하다면, 북향민에 대한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또한 정부가 ‘북향민’ 용어를 사용하는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탈북이라는 용어가 단절의 정체성을 표현했다면, ‘북향’은 연결의 정체성을 보여준다”며 “‘북향민’ 용어 사용은 그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청년들은 일상과 일터에서 마주하는 구체적인 고충들을 가감 없이 털어놓았다. 북한에서의 경력이 한국 사회에서 무시되는 경험으로 인한 심리적 위축, 북향민 민간단체에 대한 사회의 연대의식 부족 등 일상에서 보이지 않는 편견을 주요 어려움으로 꼽았다.

- 이들은 우리 사회가 북향민을 분리된 집단이나 수혜 대상이 아니라, 같은 사회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동등한 구성원으로 바라보는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 아울러 진정한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사회 각 분야에서 역량 있는 북향민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면서, 사회적 편견이 그 길을 가로막지 않도록 정부가 정책적·제도적인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정부는 북향민 청년들을 우리 사회의 소중한 동반자로 인식하고, 북향민 청년들이 제기한 취업과 정착 과정에서의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 나아가 우리 사회의 통합을 돕는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

붙임 : 간담회 사진(별도 첨부)

담당 부서	사회문화협력국 자립지원과	책임자	과 장	권동혁 (02-2100-5920)
		담당자	사무관	정지혜 (02-2100-5795)

